

## Risk or Opportunity?: Ambivalence and Social Integr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in Bae Sul<sup>1#</sup>, Eun Hee Song<sup>2+</sup>

<sup>1</sup> Institute of Public Affair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sup>2</sup>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120 Eonju-ro, Gangnam-gu,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eek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To achieve this, 20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long with the review of the policies and supporting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refugees as the policy target have been defined in various ways, such as South Korean citizens, defectors, refugees or migrants. Second,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ir dual identity as South Korean born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with South Korean citizenship. Third, they showed ambivalent attitudes in economic adjustment process and in equality of opportunity.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ambivalence,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integration, (mal)adjustment

### 1.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주민의 국내 유입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성과 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집단 간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위험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국내 입국 규모의 증대는 통일준비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의 위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Lee,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누적 입국자 수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3만 명을 돌파하였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6).<sup>1)</sup> 이러한 수치는 한국사회 구성원들 간 통합과 향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작은 규모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의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

# The 1st author: Jin Bae Sul, Tel. +82-2-2123-3519, e-mail, jbsul@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Eun Hee Song, Tel. +82-2-572-7090, e-mail, songinss@gmail.com

1) 2016년 11월 11일 제3국을 통해 7명이 입국하면서 이날 기준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3만을 돌파하였으며(Ministry of Unification, Press Releases, 2016.11.15.) 2016년 말 현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0,211명이다.

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2016년 7월 망명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와 같이, 최근 해외에 근무하던 북한 고위직이나 외화벌이 일꾼, 식당 종업원 등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경 통제 강화 등으로 급감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를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탈북 및 입국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협의 관리는 우리 사회가 해결하여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 및 통일리더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정착지원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사선을 넘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라는 특수성과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문화·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주민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 집단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각종 정착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은 곧 사회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준비 역할에 대한 회의론으로 귀결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물질적 측면의 정착지원에 집중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키고(Sul, *et. al.*, 2014)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남한의 취약계층이나 북한이탈주민 간 형평성 저해나 역차별 등 새로운 갈등요인을 낳고 있다. 즉 기존의 정책이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행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의 부족이 내재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행태는 특수집단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특권의식과 사회부적응을 경험하는 이주민으로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취약계층 의식이 공존하는 양가성의 특징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탈북 유형이 변화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지원 위주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고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통합적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및 선행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심층면접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성을 발견하고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가성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관련 제도 및 정착실태를 검토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대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나타내는 태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 II. 이론적 논의

### 1. 양가성: 상호 대립되는 가치와 목표의 공존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흔히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 사이에서 형성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특정 대상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갈등, 즉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Kaplan, 1972; Priester & Petty, 1996).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가 양가성이다(Bohner & Dickel, 2011: 394; Cacioppo, *et. al.*, 1997; Lavine, *et. al.*, 1998; Rudolph, 2011). 이러한 양가성(ambivalence)의 개념은 여러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각 학문이나 연구

분야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행정학에 서는 한 사회 내에서 서로 상반된 가치가 병존하는 것으로 가치의 양립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며(Study Group for Standard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erms, 1999: 7),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감정과 태도, 경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002). 다시 말해 양가성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상호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반응이나 믿음,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Armitage & Conner, 2000: 1421; Conner & Armitage, 2008: 262).

예를 들어(Bohner & Dickel, 2011: 394), 흡연경험자는 흡연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건강정보를 접하면서 흡연의 폐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 경우 흡연경험자는 흡연에 대한 과거의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부정적 평가를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그 판단에 혼란이 일어난다(Petty, *et. al.*, 2007).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때로는 불쾌한 상태나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부정적 영향과 심리적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한다(Clark, *et. al.*, 2008; Keele & Wolak, 2008; Kenneth, *et. al.*, 2014: 5). 이처럼 양가성은 혼합된 감정을 경험할 때, 즉 서로 반대되는 가치·목표·동기 등이 공존할 때 발

생한다. 결국 양가성은 사상이나 관습, 목표, 가치, 그리고 상황 등에 대해 두 가지의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Education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양가성은 이주민의 정주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흔히 사회적응과정에서 정주국과 모국을 포함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을 통해 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Sul, *et. al.*, 2013),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모국과 정주국의 문화가 동시적으로 내재하는 양가성이 있다(Lee, 2007: 46; Sung, 2011: 309).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주민들에서 나타나는 문화 정체성의 양가적 특성과 더불어, 정착과정에서 한국사회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불신을 동시에 보이게 되며 동일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벗어나 한국사회에 편입되어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교육이나 생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사회나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

Table 1. Definitions of ambivalence

Scholars	Definitions
Meehl(1961) (quoted in Emmons, 1996)	the existence of simultaneous or rapidly interchangeable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toward the same object or activity, with the added proviso that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be strong
Gardner(1987: 241)	a psychological state in which a person holds mixed feelings(positive and negative) towards some psychological object
Eagly & Chaiken(1993: 123)	'the extent of beliefs' evaluative dissimilarity (or inconsistency)
Breckler(1994: 359)	a conflict aroused by competing evaluative predispositions
Wegener, <i>et. al.</i> (1995: 460)	the extent to which one's reactions to an attitude object are evaluatively mixed in that both positive (favorable) and negative (unfavorable) elements are included
Thompson, <i>et. al.</i> (1995: 367)	[an inclination] to give it [an attitude object] equivalently strong positive or negative evaluations
Emmons(1996: 326)	an approach-avoidance conflict—wanting but at the same time not wanting the same goal object
Armitage & Conner(2002: 1421); Conner & Sparks(2008: 262)	the simultaneous exist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of an attitude object

\* Source: Based on Conner & Armitage, 2008: 263.

만 이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보이는 한국인(선주민)의 이중적 태도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일부 발견된다(Eom, 2016; Kwon & Kyoung, 2016).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이들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특성 및 한국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를 양가성(ambivalence) 개념으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

## 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접근 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기존의 사회 계층화에 따른 갈등과 더불어, 최근 이주민 유입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로 인해 노출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형성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이다(Sul & Song, 2015: 197). 그러나 사회통합의 개념은 학자나 연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통합(integration)이란 한 사회 속에 새로운 구성원을 단순히 편입·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사회 전체의 통합(societal integration)은 거시적 수준의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미시적 수준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구분은 Lockwood(1964)가 1950년대 기능주의와 이를 비판한 갈등이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Habermas(1981), Giddens(1984) 등에 의해 재정의 되었다. 여기서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은 한 사회체계의 부분이나 하위체계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며, 사회통합은 한 사회의 개별 구성원이나 행위자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Lockwood, 1964: 244-256: as cited in Marshall, 1994: 488-499; Mouzelis, 1997: 111). 즉, 체계통합은 하나의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하위 체계들이 공동의 질서 아래 통합되어 가는 구조적 통합(structural integration)인 정치 및 경제체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 연대 없이도 작동한다. 반

면 미시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이민이나 귀화와 같이 새로운 구성원이 그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과정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도덕적이고 가치적인 통합(moral integration)을 의미한다(Kreckel, 1999: 85-95). 따라서 사회통합이란 자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DECA, 2013: as cited in Song & Sul, 2013: 36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개념은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향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여기서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공동의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과정”(Hong, 2000: 371)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분단의 현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향후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대이며,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 논의의 틀이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주로 일을 통한 경제적 적응과 가치통합인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Kwon, 2014; Sul, *et. al.*, 2014; Sul & Song, 2015), 다문화주의나 이주민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관점을 확장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Hur, 2012; Yoon, 2015). 특히 Yoon(2015)은 이민자 통합지수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물질적·제도적 차원의 체계통합과 정신적 차원의 가치통합으로 구분하고, 하위영역으로 인권, 사회적응, 기회평등의 체계통합과 소속감, 유대관계의 가치통합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정의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차별받지 않으며 안정되

고 안전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주류사회(남한)가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포함됨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를 준수할 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향후 남·북한 주민 사이의 도덕적, 가치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적 시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III.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정착실태

####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법·제도적 특성: 당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던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Act on the Special Compensation for Patriots and North Korean Defectors)<sup>2)</sup>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1979년부터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Act on the Special Compensation to Defecting North Korean Soldiers)<sup>3)</sup>에 의해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였다. 1993년부터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Act o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patriates)<sup>4)</sup>에 의해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여 정착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1997년에는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반을 확립하고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및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sup>5)</sup>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hereafter the North Korean Refugees Act)<sup>6)</sup>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련 법령은 폐지되었으며, 동 법에 의해 기존의 ‘귀순’의 개념이 ‘북한이탈’로 대체되고 자립·생활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두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되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6).<sup>7)</sup> 동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The North Korean Refugees Act, §1)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을 보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주재국과의 입국 교섭과 한국 입국을 지원한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조사종료 후에 보호 결정을 받고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사회적응교육을 통해 심리안정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진로지도 상담 및 기초 직업훈련을 받으며 가족관계 창설과 주거알선, 정착금 및 장려금 지원 등 초기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 하나원 수료 이후에는 거주지로 편입되어 5년간 거주지 보호를 받게 되는데, 지역의 사회안정망에 편입되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 주거지원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은 물론, 취업, 자산형성, 교육

2) Enactment 1962.4.16. Law No. 1053.

3) Enactment 1978.12.6. Law No. 3156 (Enforcement 1979.1.1.).

4) Full Amendment 1993.6.11. Law No. 4568 (Enforcement 1993.12.12.), Repealed by Law No.5259 (1997.7.14).

5) Reason of legislation,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North Korean Refugees Act).

6)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Short title: North Korean Refugees Act), Enactment 1977.1.13. Law No. 5259 (Enforcement 1977.7.14), Recent Amendment 2016.11.15. Law No. 14275.

7) North Korean Refugees & Resettlement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39> (retrieved Nov. 9, 2016).

Table 2. Re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Classification	Program	Description
Resettlement subsidies	Basic resettlement subsidy	₩ 7 million for a single person household
	Incentives	Vocational training, acquisition of certificate, & employment incentives (Up to ₩ 25.1 million )
	Additional benefits (for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s)	Up to ₩ 15.4 million for the aged, the disabled, those under long-term medical treatment, and children of a single-parent family
Housing	Housing arrangement	Rental housing arrangement
	Housing subsidy	₩ 13 million for a single person household
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fees supported in full; and) monthly training allowances of ₩ 200,000 provided during the training period(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er subsidy (paid to employers)	A half of wages for North Korean refugee employees are subsidized up to ₩ 500,000 for up to four years
	Employment protection	Operation of 56 nationwide employment support centers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support for resettlement in agricultural areas and business start-ups, and provision of employment support vouchers
	Others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support for resettlement in agricultural areas and business start-ups, and provision of employment support vouchers
Social Security	Livelihood benefits	Designated as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 500,000 per month for a single-person household
	Healthcare	Designated as recipients of class I healthcare benefits eligible for medical care services with no patient contributions
	Special pension plan	Those who are aged 50 through 59 at the time of entry are eligible for national pension
Education & Training	Special admission and school transfer	Special admission and transfer to colleges (based on college-specific special admissions outside the normal fixed quota)
	Support for school fees	Tui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s and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exempted; 50 percent of tuition subsidized for private universities
Counseling	-	Initial resettlement assistant(nationwide 530 counsellors)
Protection officers	-	Follow-up services through protection officers, professional counselors, and resettlement assistants /employment protection, personal protection /safety protection

\* Source: Based of data from 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Re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2> (retrieved 2016. 11.9.);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2016 Manual for the Re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15-16.

등 자립과 자활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2016).<sup>8)</sup>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Table 2>와 같다.

이처럼 정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나아가 이들을 통일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준비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현실적 부적응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지를 배정받고 지역 사회안전망에 포함되게 된다.<sup>9)</sup> 1994년까지는 거주지를 수도권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다른 지역에 거주지가 배정되면서 2000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비율이 54%를 넘었다(Im, 2012: 252). 그러나 지방에 거주지를 배정받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울이나

8) 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Entrance and settlement procedure of North Korean refugees,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1> (retrieved 2016.11.9.).

9) 과거에는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5년간은 주소나 직업, 또는 근무지가 바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North Korean Refugees Act, §28, 2014.5.28, repealed by Law No. 12683).

수도권으로 이주함으로써 2016년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서울 24.8%, 경기 29.8%, 인천 9.4% 등 수도권에 64%가 거주하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7). 이것은 전체 국민의 수도권 집중 비율 49.5% (Ministry of the Interior, 2017, as of December 2016)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정착지원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찾아 북한이탈주민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소득 수준과 관련한 생계급여 수급률과 교육 측면의 중도탈락률, 그리고 경제활동과 관련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이다. <Table 3>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은 2007년 63.5%에서 2016년 24.4%로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중도탈락률 역시 2008년 10.8%에서 2015년 현재 2.1%로 점차 감소하여 정착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기초생계급여 수급률(3.2%, as of 2015)이나 중도탈락률 0.83%(as of April 2015)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2017).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200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어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59.4%, as of 2015)은 일반국민 전체(62.6%, as of 201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도 2015년 기준 54.6%로 전체 고용률 60.3%(as of 2015) 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2007년 22.9%에서 2015년 4.8%로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 전체의 실업률 3.6%(as of 2015) 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6: 38;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2017). 이처럼 정착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경제적 적응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사회부적응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Table 4>). Ministry of Unification(2015)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from 2006 to August 2015)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범죄, 재입북, 제3국으로의 망명, 그리고 부정 수급 등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가 중지 또는 종결된 자는 185명에 이르며, 자살에 의한 사망자도 31명에 이른다(Kim, 2016: 61-62).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비보호 탈북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 수감자는 지난 2011년 51명에서 2016년 8월 26일 기준 129명으로 153%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은 지난 5년 대비 136% 증가한데 비해 여성의 경우 350% 증가하는 등 탈북여성의 수감이 큰 폭

Table 3. Key indicators concerning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unit : %)

Classificatio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General People(2015)
Livelihood benefit receipt rate	63.5	54.8	54.9	51.3	46.7	40.8	35.0	32.3	25.3	24.4	3.2 <sup>a</sup>
Dropout rate	7.1	10.8	6.1	4.9	4.7	3.3	3.5	2.5	2.2	2.1	0.83(0.45) <sup>b</sup>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	62.6 <sup>c</sup>
Employment rate	36.9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	60.3 <sup>d</sup>
Unemployment rate	22.9	9.5	13.7	9.2	12.1	7.5	9.7	6.2	4.8	-	3.6 <sup>e</sup>

※ a : the total number of basic livelihood benefit receipt(as of 2015) ÷ the total population(as of 2015) × 100

b : 2014 dropout rate(as of April 1, 2015). ( ) is the rate of dropout due to school maladjustment.

c, d, e : As of 2015

※ Source : Based on data from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2017,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6, *Monthly Labor Market Analysis*, 67(1): 38; Ministry of the Interior, 2016, Statistics of Registered Popul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Statu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4 Status of Dropout Student Press Release (2015.9.8.).

Table 4. (Criminal) Offenses and suicide committed by North Korean refugees

Classification (Period)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Protection / Suicide	Prison Inmates	
	(2006~2015.8)	2011.6.30	2016.8.31.
(Criminal) Offenses/ Suicide	182 / 31	51(49)	129

※ Sources: Ministry of Unification, 2007(as cited as Kim, 2016: 61-62); Munhwa.com, 2016.10.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401070403022001> (retrieved 2016.10.20.).

으로 증가했다(Munhwa.com, 2016).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보호 및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도피생활과 직업 및 소득, 그리고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사회부적응이 범죄로 연결되어 사회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부적응 및 범죄와 관련한 위기관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 IV. 연구의 방법

##### 1. 분석틀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Table 5>과 같이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정책대상으로서의 특성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입국 특성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은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회·심리적 적응, 경제적 적응, 기회평등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양가적 태도를 분석하였다. 사회·심리적 적응은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 잘 어울리기 위하여 자신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은 한국사회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하고 한국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다(Sul & Song, 2013: 295-296). 따라서 사회·심리적 적응을 생활 만족도와 정체성으로 세분하였다. 경제적 적응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과 기술, 직업 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Sul & Song, 2013: 294). 하위 영역으로는 취업 또는 기초생계비 수급여부, 구직 및 직장생활, 교육훈련 등으로 세분하였다. 기회평등은 북한이탈주민이 노동시장이나 주거, 일상생활, 정치참여 등에서 선주민과 얼마나 동등한 기회를 갖는가와 관련한 것으로 주류사회에서의 참여나 차별 및 배제 경험에

Table 5. Framework of analysis

Classification	Topic	Main Context
Characteristics as Policy target	- Concepts of North Korean Refugees	- legal defini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 Characteristics of Escaping (from N,K) & Entering(into S,K)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including gender, age, and size - motive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Social Integration	- Psycho-social adjustment	- (dis) satisfaction of life in South Korea - identity
	- Economic adjustment	- basic livelihood benefit receipt - job seeking and working condition - job training and getting licence
	- Equity of opportunity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 policy participation :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e.g. national defense, tax payment) - roles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지원제도에 내재된 양가성과 사회통합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태도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한다.

## 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도 및 법률을 검토하고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관련 정책에서 나타나는 양가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의 양가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정착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이나 업무 종사자나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정착기간, 활동영역 등을 고려하여 임의 추출 및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sup>10)</sup>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015년 8월~9월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면접대상자를 방문하거나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에 모이도록 하여 먼저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재하도록 하고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면담 내용을 첨부하여 필사하였으며 해석이 불명료한 사항은 추가 전화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여성 12명(60%), 남성 8명(40%)이며,

연령은 학생 3명이 20대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40대 이상이다. 정착기간은 2년 정도의 최근 입국자부터 정착기간이 15년 이상인 자를 포함하고 있다. 직업은 대학생 3명, 정부기관 소속 4명, 북한이탈주민 단체 및 관련 연구 등 활동가 2명, 전문직 3명, 요양보호사, 교육 코디네이터, 회계사 등 회사원 5명, 개인서비스업 2명, 그리고 자영업 1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남한에서의 교육경력이 없는 경우 북한 학력 기준)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졸이상이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sup>11)</sup>

## V. 분석 결과 및 논의

### 1. 정책대상으로서의 양가적 특성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적 특성: 국민, 망명자, 난민, 이주민

사전적 의미로 북한이탈주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사람(North Korean defector)을 의미한다(Wikipedia, 2017). 법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the North Korean Refugee Act, §2)<sup>12)</sup>을 말하며, 보호 결정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민,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주민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어왔다.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은 개념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적 용어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용어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월남귀순자에서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로 변화하였으며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the North Korean

10) 무작위 표본추출의 한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접촉 가능한 기관이나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11)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기관명이나 직책,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면접대상자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여 포괄적인 단어로 표기하였다.

12)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Short title: North Korean Refugees Act, Enactment 1977.1.13, Law No. 5259, Enforcement 1977.7.14, Recent Amendment 2016.11.15, Law No. 14275), §2.

Table 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bjects

(N=20)

Classification	Gender	Age	Period of Settlement (years - months)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in N,K)	Educational Background (in S,K.)	Job or Affiliation
A	F	50	6-10	married	technical school	none	sales person
B	F	25	14-10	single	under elementary sch.	university	student
C	M	42	15	married	college	graduate school	temporary worker (culture & art area)
D	M	52	15-5	married	college	graduate school	business person
E	F	50	5-6	spouse died	college	graduate school	temporary worker (in school)
F	F	41	12-6	married	technical school	graduate school	researcher
G	F	50	4-8	separated	college	cyber university	temporary worker (individual service)
H	F	49	4-2	separated	technical school	cyber university	business person (tourism service)
I	M	22	3	single	technical school	university	student
J	F	75	18	married	college	none	heath care service
K	F	43	4-4	married	middle school	cyber university	taxation business
L	M	43	18	married	college	graduate school	self employed (manufacture)
M	F	48	6-7	single	middle school	university	CVS cashier
N	F	48	9-6	single	middle school	cyber university	temporary worker (individual service)
O	F	21	2-6	single	elementary school	university	student
P	F	51	13-1	separated	college	graduate school	temporary worker (activist)
Q	M	53	10	married	college	none	public institute
R	M	54	2-1	married	college	none	public institute
S	M	51	9-10	married	college	graduate school	public institute
T	M	43	3-9	married	college	graduate school	public institute

Refugees Act) 이후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변화하였다.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탈북한 정치적 망명자의 개념에서 생존형 난민이나 이주형 난민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영문표기를 보면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North Korean Refugee Act, §2)이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의 영문명은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로 북한이탈주민을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로 표현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 거주자, 북한이주민의 의미이다. 그러나 2014년 개정법부터는 동법의 영문명을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난민(refugee)’의 개념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개념정의(§2)에서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비록 난민법상의 난민(Refugee Act, §2)<sup>13)</sup>이라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보려는 정부의 의도가 내포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Lee, 2016: 7). 북한을 이탈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North Korean migrant)이라는 시각과 북한을 탈출한 북한난민이나 망명자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하겠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처럼 사선을 넘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주류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편입되어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는 북으로부터 이탈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13) Refugee Act of ROK, Enactment 2012.2.10. Law No. 11298, Recent Amendment 2016.12.20. Law No.14408.

Table 7.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by year (as of Dec. 2016) (unit : person, %)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Total
Male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298	8,801
Female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9	21,410
Total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7	30,211
Female %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73.1	75.6	78.2	80.3	79.0	70.9

\* Source: Based on data from Ministry of Unification, 2017,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last retrieved 2017.1.25.).

지닌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과 동시에(또는 보호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하며,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결혼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일반 이주민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갖는 국민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의 특성을 갖지만 일반 이주민과는 차별화되고 또 난민이나 망명자와 같은 특수집단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인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2) 입국규모 및 인구 구성상의 특성: 인적 자원 vs 사회적 비용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해오다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국경통제와 탈북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6).<sup>14)</sup>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해외에 근무하던 외교관, 외화벌이 일꾼, 식당 종업원 등의 북한이탈 및 국내 입국이 증가하면서 2016년 11월 11일을 기점으로 누적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수는 3만 명을 돌파하였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7).<sup>15)</sup> 또한 김정은 체제 이후 급감하였던 북한이탈주민수가 2016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최근의 해외 근무 엘리트 계층의 탈북 현상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량 탈북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적자원으로의 북한이탈주민 활용 가능성과 함께 소요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나 규모는 달라져야 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은 기존의 지원 위주의 정책 수혜대상이 아니라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Sul & Song, 2015: 195).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의 증가 및 대량 탈북 가능성과 더불어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으로 구성상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여성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정치적 망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8년까지만 해도 여성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 이후 생존형 탈북이 증가하면서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비율이 남성비율을 추월하였으며, 2016년 12월 말 현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70.9%에 이른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7).<sup>16)</sup> 여성의 경우 비교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탈북이 용이하며 탈북과정에서도 은신을 하거나 도피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이나 도피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인권유린이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Sul & Song, 2013: 296). 이러한 경험은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착과정에서 주변 사람이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양가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성상의 또 다른 특성은 청·장년층의 높은 비율을 들 수 있다. 2016년 12월 말 입국자를 기준으로 입국 당시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14) Ministry of Unification,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retrieved 2016.11.9.

15) Ministry of Unification, Press Releases, 2016.11.15.

16) Ministry of Unific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retrieved 2017.1.25.).

Table 8.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by age (as of Dec. 2016)\*

(unit : person, %)

Classification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 & older	Total
Male	624	1,572	2,406	2,028	1,286	491	325	8,732
Female	620	1,918	6,092	6,661	3,801	1,147	920	21,159
Total	1,244	34,90	8,498	8,689	5,087	1,638	1,245	29,891
Ratio	4.2	11.7	28.4	29.1	17.0	5.5	4.2	100.0

\* Age at the time entry

\* Source: Based on data from Ministry of Unification, ROK, 2017,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last retrieved 2017.1.25.).

28.4%, 30대 29.1%, 40대 17%로 20~40대의 청·장년층이 74.5%를 차지한다. 이는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인적자원 비율이 높아, 일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l & Song, 2013: 297).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위한 정책과 교육·훈련이 강조되며, 통일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3) 탈북동기의 변화: 생계형 vs 이주형

1990년대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탈북하여 한국에 온 영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개념적 특성에서 살펴본 월남귀순자와 월남귀순용사는 이러한 정치적 망명자를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기근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탈북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시기의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생존형 난민(refugee for survival)이나 생계형 난민(refugee for living)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가 변화하고 있다. Korea Hana Foundation(2016)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식량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4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을 따라서'가 14.1%, '신변 위협'이 10.7%, '먼저 탈북한 사람의 권유' 7.1%,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5.4%, '주변 사람의 권유' 4.8%, '통제가 싫어서' 3.7%, '가족을 찾거나 결함을 위해서' 3.1%,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1.5% 등의 순이다(Korea Hana Foundation, 2016: 119). 한편 통일부가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1년 조사에서의 탈북이유는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이 66.7%였으나 2014~2016년 조사에서는 12.1%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자유추구'는 11.7%에서 32.8%로 증가하였다(Chosun Ilbo, 2016.11.14, 8). 또한 고위 탈북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 및 장래가 탈북의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입국한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나 중국의 식당 여종업원들처럼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이나 외화벌이 일꾼 등의 입국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sup>17)</sup>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여전히 경제적 이유가 주를 이루지만, 해외에 있던 북한 주민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등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탈북과 가족단위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 즉 탈북 유형이 과거 경제적 빈곤에 의한 생존이나 생계형(refugee for living or survival)에서 최근에는 비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주형(refugee for migrant)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일방적인 정착지원에서 탈피하여 자립과 자활, 즉 경제적 적응을 위한 정책과 나은 삶에 초점을 두는 사회·심리적 적응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즉 사회통합의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 2. 정착과정에서의 양가적 태도

### 1) 사회·심리적 적응: 환상 vs 실제

- (1) 한국생활 만족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자유 & 돈  
앞서 탈북 동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경제적 이유

17)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에 의하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고위직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하다(Seoul News: Dong-A Ilbo, 2016.11.14.; Chosun Ilbo, 2017.1.18.).

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대체로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Korea Hana Foundation, 2016)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생활 만족 비율(63.8%)은 불만족한 비율(3.5%)에 비해 월등히 높다.<sup>18)</sup> 만족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46.5%), ‘북한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43.3%) 순이며, 한국 생활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6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한국 사회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 42.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과 차별 때문에’ 30.9%,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 19.8%,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6.8% 순이다(Korea Hana Foundation, 2016: 229-234).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만족요인은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다. 한편 경제적인 문제는 불만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들은 흔히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지만 실상 경제적인 문제가 한국생활의 만족/불만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도 휴대폰과 승용차”(E) 등으로 특히 승용차는 이들에게는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 오길 잘했어요. 북한에 비해 훨씬 좋아요.”(G)

“하늘과 땅 차이지요. 북한에서는 지금 나의 생활에 대해 상상도 못 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나의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요. ……차 새로 바꿨잖아요. 탈북자가 남한 와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휴대폰하고 차예요.(웃음)” (K)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이

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정당하게 돈을 벌고 써야 하며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의식은 부족하다.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적 규범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위적 규범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P의 진술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들은 남한에서는 뭐든 자유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되면 큰소리치고, 남자들은 돈 생기면 먼저 성매매하려 하고……. 여자들은 돈 쉽게 벌려고 그런 데로 빠지고……. 남한에서는 하층에서 그러는데, 탈북자들은 남한은 성이 개방적이고 다들 그러는 줄 아는 거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 엉망이지. 이런 걸 교육해야 해요.”(P)

그러한 사고는 “한국에서는 성적 차별이 심하고 여자를 성노리개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다”(R)는 R의 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P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며 면담자의 동의를 구하려 하였다.

“뭘 그리 돈을 잘못 썼다고 난리야. 탈북자한테는 그냥 주면 안 돼요? 가서 큰 소리로 따질 거예요. 그럼 뭘 어찌겠어…….”(P)

G의 말처럼 “삶의 욕구를 돈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강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왜냐면 새로운 삶의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이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길 아닌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최우선”(H)이기 때문이다.

18) 조사 결과 만족 63.8%, 보통 32.8%, 불만 3.5%로 나타났으며, 여성, 60세 이상, 정착기간 10년 이상자(정착기간이 긴 사람) 서울 거주자, 남한에서의 학력이 대학졸업 이상인 집단에서 만족비율이 높았다(Korea Hana Foundation, 2016: 229-234).

(2) 정체성: 이중적 정체성 - (북한이 고향인) 한국사람 vs (한국 국적의) 북한사람

한편 정체성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북한 출신 한국 국적자, 탈북한 한국 국적자, 국가적 정체성이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극단적으로 남한화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보호결정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라고 강조하며, 자신들을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이주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대단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을 일반국민과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듯하다. 즉 “탈북민은 다문화화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C) 그것은 “38선 이북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E)이고 “예로부터 한 민족 한겨레이며 언어도 피부도 전통문화도 같기 때문이다.”(G, I) 그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물어요?”(P)라며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들과는 달라요. 헌법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문화는 다르지만 국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B)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며<sup>19)</sup> 잠재적으로 북한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자부심은 결여되어 있으나 북한은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일부이며, 자신들은 “통일이 되면 남·북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B, C, H, K, L, S, T)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탈주민은 동일한 한국 사람이라는 당위적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양가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자신들이 특수한 집단에 속해 있는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으로 표출된다.

“현재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알게 됩니다. 만약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통일 이전에 수많은 북한 사람들은 친한파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통일에 역작용을 할 것...”(C)

“아직은 북한에서 계속 도발하다 보니 남한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모임도 가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사회의 실상을 알려주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M)

“탈북자들을 굶어서 남한에 찾아온 이방인이 아니라 통일 선각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와 국가가 통일리더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정착 교육과 함께 북한에서 받아온 세뇌교육의 허위성을 알고 자유민주사회를 잘 아는 정체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

2) 경제적 적응: 의존 vs 자립

(1) 기초생계비 수급: 왜 의존적인가? - 취업(자립) vs 복지수급(의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과 기술, 직업 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Sul & Song, 2013: 294).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활용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자원은 임금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 빈곤의 위협에 처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19) 명시적으로 자신이 북한의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다고는 언급하지 않고 타인의 일로 객관화하여 언급하였다. 본인도 북한의 가족과 연락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회피하였다.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부)적응 상태에서 검토하였듯이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에 비해 북한 이탈주민의 기초생계비 지급률은 여전히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물론 정착 초기에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면접대상자 중 학생과 고위직 탈북자인 공공기관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초생계비를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계비가 한국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면접대상자 모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급기간을 현재의 정착 후 6개월보다 긴 1년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여성비율이 높고 이들이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정착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초생계비 지원이 안 되면 힘들어요. 가족 3명 중에 자식 2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혼자 일하다 보면 적응은 고사하고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따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H)

“많은 탈북민들이 노동자나 농민 출신입니다.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서 생계비 지원이 안되면,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청소, 젊은 여자들은 술집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하나 탈북민들이 생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로 내몰리지 않았으면 해요. 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생계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K)

“몸이 불편한 사람과 중년층 탈북민들이 적응과 직업을 동시에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려워….”(O)

그러나 무조건 지급기간(currently 6 months after

settlement)이 지난 이후에도 기초생계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높다. 즉 정착 초기단계를 지난 많은 노동 가능 연령층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복지급여 수급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탈주민은 왜 취업을 안 하고 복지 수급자로 머무르려 하는가? 이는 취업을 하는 것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도 하는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양가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원래 직장생활은 원하지 않았어요…. 북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취직도 잘 안되니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M)

“탈북민은 작게는 남한사회 구성원이 될 거고, 크게는 통일의 길잡이가 될 건데, 정부나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C)

(2) 구직 및 직장생활의 장애요인: 왜 취업이 어려운가?  
- 편견 및 차별 vs 역량 부족

북한이탈주민은 구직 및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왜 취업이 어려운가? 여기에 대해서는 주류사회(남한)의 차별이나 배제 때문으로 보는 시각과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태도, 낮은 인적자본, 근로의욕의 부족 등 역량 부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배제가 구직이나 직장생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한다. 즉 북한에서 왔다는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실업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Kim, 2014: 8).

“북한의 도발 사태 때마다 회사 내에서 남한 사원들과의 트러블 발생합니다.”(M)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 및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관리자, 동료들과의 마찰이 생기고, 이로 인한 갈등이 결국 회사에 장기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었습니다. 심한 경우 3개월 만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L)

“원하는 직업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커요. 고용지원금이 없으면 취직이 어렵죠. 북한 사람이어서 남한을 잘 모른다고 보는 편견과 관점이 문제죠.”(G)

그러나 한편으로 구직이나 직장생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의사소통의 문제나 지식 및 기술의 부족, 의욕 부족 등 업무와 관련한 역량 부족이다. 일상적인 언어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업무기술이나 지식 부족으로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첫 직장은 학원 졸업하고 학원에서 소개해준 세무사 사무실에서 1년 정도 근무했어요. 낯선 환경과 업무방식, 생소한 용어, 선입견 등 1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말투예요. 사투리와 억양 때문에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식은땀을 흘렸죠. 탈북할 때의 어려움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든 1년은 견디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K)

“주변 탈북자들을 보았을 때, 능력은 없으면서 쉽고 돈 많이 버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C)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장이 자동차 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올라가서 아무리 키(곡식 등을 까불러서 쪽정이·티끌·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데 쓰는 용구)를 찾아도 없는데, 물어보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냥 안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F)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지원하

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하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이나 능력도 없이 무조건 정부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실패”(P)한다는 것이다. 실제 성공사례도 많지 않다.

“나이 제한, 경력, 북한 사람의 사투리 등으로 취직이 매우 어려워요. 또한 남한의 일부 고용주들이 고용지원금에 대한 욕심과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취직이 매우 어렵죠. 따라서 고용지원금 제도가 없었으면 해요.”(H)

“탈북민이 말도 잘 안 통하고 남한사회도 잘 모르는데 남한 사람하고 일하면 더 못하고 자존심 상해요. 탈북민 끼리 일하다 보면 말도 잘 알아듣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탈북민 맨날 채용해봐야 뭐해요. [보조금지원] 기간 지나면 다 내보내는데요.”(P)

(3) 직업훈련 및 자격증: 왜 직업훈련을 받는가?

- 보다 나은 직장 vs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업무역량을 향상하여야 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이나 운전면허 취득은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많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취업이나 업무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이 실정에 안 맞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H)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왜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는가?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구직활동이나 취업의사가 없으면서도 직업훈련 참여나 자격증 취득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전산사무회계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워드, 엑셀, 정보 처리기능사 과정도 같이 병행하면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평소 북한 사람이라고 혼자 선입견을 가지고 눈치를 많이 보았었는데 실무에서 보란 듯이 보여주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뿌듯했어요. 지금도 첫 서울 생활에서 좌왕우왕 갈피를 못 잡고 헤맬 때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K)

“남한 입국 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수년간 대학을 다니고 같은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의 일부 동료들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문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F).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취직도 안 할 거면서 교육받으려 와요. 보조금 받으려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산회계 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꼭 취업을 하실 분들만 다녔으면 합니다. 나이 드신 분, 남자분들 등 뚜렷한 취업의식이 없으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나 수당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학원에서 수강생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이 계통으로 취업의지가 있는 분들만, 또 현실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분들만 선별하여 교육을 시켰으면 해요. 탈북민들이 지금도 많이 입국하고 있지만 여러 지원 단체에서 한 사람씩 맡아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K)

### 3) 기회평등: 또 다른 구별 짓기

#### (1) 차별: 또 다른 차별 - 차별 vs 역차별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차별은 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동등한 국민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한다.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인격체이자 정부 지원과 사회의 관심을 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양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Eom, 2016).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 지원 요구는 오히려 한국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의 문제, 즉 역차별에 대한 논란을 가져온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를 의식하여, “재산과 교육 수준이 한국 국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탈북자 지원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S) 해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녀 성역할에 대한 혼란과 차별을 경험하며, 여성의 경우 “남한은 여성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K)을 갖지만 남성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C)고 인식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지원정책이 꼭 필요해요. 북한이탈주민은 겉모습은 성숙하였지만 속은 미숙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다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요.”(J)

“생소한 땅이고 무산자이며... 새 삶에 대한 대책이 매우 필요해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으로 돌보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K)

“여자는 경찰청이나 여러 곳에서 초대하는 행사에도 많이 다니고 도우미들이 취업도 알선해 주지만 남자들은 아무런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다 보니 북한에서의 습관을 못 버리고 집에서 술 마시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중년 남성들의 취업 자리를 알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M)

“한국사회에서 남성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성들이 너무 자신을 높이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웃음)... 북한은 여자가 애 키우고 일하고 남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데,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I)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역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며,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 집단의 목소리만 투영되어 그들 간 또 다른 구별 짓기, 즉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별 짓기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이나 집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북한이탈주민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어 거기에 남한 사람들의 취업과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N)으로 보기도 한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울, 인천, 경기로 몰려서 집을 받다 보니 다른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무언가 혜택이 있을 때 그것이 지방이 아닌, 서울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북한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가면 말투나 여러 문화가 달라서 많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보완 해주었으면 좋겠다.”(O)

“지난번[2015년] 통일 박람회에서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과의 간담회에서 몇몇 탈북민 단체장들만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 전체 탈북민(일반)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일반 탈북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

“제 주변만 봤을 때, 대부분의 탈북민 관련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보다는 예산을 따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단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탈북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 10만 명이 된다는데 2만 8천 명 정도[3만 명]의 탈북민들은 이를 전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C)

(2) 참여: 의무 회피 - 권리 vs 의무

면접대상자들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는 2등 국민이 아닌 동등한 국민이라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주며 통일역군으로서의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면접대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는 반면에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하고 있으며,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실천적 측면에서는 다소 약한 양가적인 태도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병역이나 납세 의무 등과 관련하여 “탈북자라고 하여 군병역 면제 등 이중국적자 같은 취급을 하지 말고 국민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A)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납세의 의무는 이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K)고 의무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 등 사회부적응에 대한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적 요소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와서 중2 때부터 전국의 학교를 선생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통일교육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렸고 지금도 가끔 참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과정도 참여하고 싶어요.”(M)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제안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멘토링 활동에 대해 기획하고 직접 진행하면서 좀 더 나은 지원방안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멘토링 활동은 탈북민의 빠른 사회적응에 있어 가장 적절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I)

“북한이탈주민에게 시민으로서의 의미(예, 병역의무 등)를 부과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해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봐요.”(E)

“탈북민의 언론 노출을 자제해야 해요. 또 탈북민을 병역의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없거나 이등국민이라는 시각을 부각하는 거죠.”(P)

“탈북 청소년의 이탈과 범죄를 묵인해야만 하는 것은 앞으로의 다가올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밝힐수록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수의 탈북자들이 적응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 국민들이 편견을 더 가지겠지만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들이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게 될수록 정신적 고통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SNS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잘 조합해서 알려주면 국민들의 안 좋은 편견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B)

Table 9. Results of analysis

Classification	Topic	Main Context : Key Findings & Implications	Core Phenomenon
North Korean Refugee as Policy Target	- Concepts of North Korean Refugee	- legal definition of North Korean refugee : citizen, defector, refugee, migrant	Ambivalent Concepts and Characteristic Change of North Korean Refugees as Policy Target
	- Characteristics of Escaping (from N,K) & Entering(into S,K)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 human resource vs social costs - motive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 refugee for living(economic) vs refugee for migration(noneconomic)	
Social Integration (Settlement Process)	- Psycho-social adjustment	- satisfaction of life in South Korea : freedom & money - identity diffusion (ambivalent identity) : S, K citizen born in N,K, vs Special resident from N, K,	Ambivalent attitudes presented in Settlement Process
	- Economic adjustment	- basic livelihood benefit receipt : work activity vs welfare dependency - job seeking and working condition : discrimination vs lower capacity - job training & licence : better job vs getting subsidies	
	- Equity of opportunity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 making another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vs reverse discrimination - participation : rights vs duties(e.g. national defense, tax payment) - roles : ridge of unification vs vulnerable welfare recipient	

(3) 역할 : 통일역군 vs 취약계층(보호대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통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정부가 부여한 자신들의 통일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운동을 리드할 핵심역량으로 국가 주도로 육성”(Q)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나친 통일 역할의 강조는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Lee, 2016: 12). 통일역군은 안정적인 정착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역할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부적응으로 사회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 이들을 통일역군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면접대상자들은 통일역군이 되기 위하여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선을 넘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하나원의 통일교육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역군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남한 교육을 더 받으면서 통일의 선두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O)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왔기보다 행복을 찾아서 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도 자신이 행복해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길 바라는 바람으로 통일준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여기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T)

“통일준비와 통일리더 교육은 안정적인 정착 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 정착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코 통일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탈북민들의 실상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은 남북한 통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정착하는 것이 통일된 한국에서 고향 북한을 이끌 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공하여 고향 북한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을 중심에 두고 그들을 미래 한국의 통일인재로 준비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I)

VI. 결론 및 제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회

적 갈등과 위협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은 주요 정책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과 관련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및 위기관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개념 및 정착지원 제도의 특성과 사회적응 실태를 분석·검토하고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정과 정책에 대한 양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견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양가적 특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의미이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은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의 특성을 갖지만 일반 이주민과 차별화되며 난민이나 망명자와 같은 특수집단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이다. 정책대상으로서의 이러한 복합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인구 구성상의 특성으로, 규모의 증가와 높은 청장년층 비율은 한국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양가적 특성을 지닌다. 특히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특히 여성)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인적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지원이 따른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통일리더로 양성한다는 측면과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구성상의 양가성은 의미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가 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경제적 적응 및 사회·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는 사회통합 관점으로서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은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태도의 특성과 의미이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과정에서 양가적 태도가 나타났다. 면접대상자들은 한국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한국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당위적 규범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이중적 태도를 갖는 양가성이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유, 성,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면접대상자들은 대체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 잠재적으로 북한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란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여,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존재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큰 소리 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적응과정에서 자립자활과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의존하려는 양가적 특성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지원을 희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업을 구하지 않고 정부의 기초생계비 수급자로 남아 있으려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구직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체는 업무와 관련한 지식이나 기술 부족, 근로의욕 부족 등 역량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업훈련이나 교육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맞는 직업훈련 및 교육을 요구하지만, 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직업훈련을 이수하기보다는 보조금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이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은 물질적 지원 위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자립자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을 통한 자립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기회평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구별 짓기, 즉 역차별의 특성이 나타났다. 특수집단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에서도 성별, 지역 간, 계층 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참여 및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그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권리나 역할에 따른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나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양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지나친 통일 역할의 강조, 즉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나친 '특별한 존재'로의 대우가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이나 배제를 가져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Yoon, 2012), 의무와 책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특별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과 의미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사회통합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통합의 시험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역할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통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북한이탈주민을 차별받지 않고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성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방향 설정 및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ct o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patriates. Full Amendment 1993.6.11. Law No. 4568(Enforcement 1993.12.12.), Repealed by Law No. 5259(1997.7.14).
- Act on the Special Compensation for Patrio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Enactment 1962.4.16. Law No. 1053.
- Act on the Special Compensation to Defecting North Korean Soldiers. Enactment 1978.12.6. Law No. 3156 (Enforcement 1979.1.1.).
-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002. *Psychoanalytic Terms & Concepts*. Trans. by Lee, Jae Hoon. Seoul: Korean Institute for Contemporary Psychoanalysis.
- Archer, Margaret. 1996.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Developing the Distinction. *Sociology*. 30(4): 679-699.
- Armitage, C. J. and M. Conner. 2000. Attitudinal Ambivalence: A Test of Three Key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1421-1432.
- Chosun Ilbo. 2016.11.14. North Korean Defectors Surpassing 3 Million.
- Conner, Mark and Christopher J. Abmitage. 2008. Attitudinal Ambivalence. In William D. Crano and Radmila Prislin (eds.).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actment. 1987.7.17. Whole Amendment(Constitution No.10, 1987.10.29.).
-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 Dictionary of Educational Terms*. Seoul: Haudongseol.
- Eom, Tae Won. 2016. A Qualitativ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as Immigrant: Beyond the Boundary between Survival and Daily Life. *Journal of Korean Social Administration*. 18(1): 165-196.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2 bde. Frankfurt/M.: Suhrkamp.
- Hong, Ki Joon. 2000. Searching for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Social Integration after Korean Un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9(3): 369-390.
- Hur, Joon Young. 2012. An Explanatory Study on South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A Critical Approach to West German Conflict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1(1): 271-300.
- Jang, Joon Oh and Sung Ho Ko. 2010. *North Korean Defectors: Crime & Countermeasur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aplan, K. J. 1972. On the Ambivalence-indifference Problem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A Suggested Modification of the 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Psychological Bulletin*. 77: 361-372.  
<http://dx.doi.org/10.1037/h0032590>. (Retrieved 2017.1.16.).
- Kim, Hwa Soon. 2014. The Effects of Work Type in North Korea on North Korean Migrants' Employment in South Korea. *Unification Policy Studies*. 23(1): 1-40.
- Kim, Hye Rim. 2016. Study on the Phenomenon of Defecting from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Era and Support Institution for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Research of Ethnology (Minjok Yeonku)*. 66: 46-72.
- Kim, Sung Kyung. 2012. 'Defector', 'Refugee', or 'Migrant'? North Korean Settlers in South Korea's Changing Social Discourse. *North Korean Review*. 8(2): 94-110.
- Korea Hana Foundation(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2016. *2015 Social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Kreckel, Reinhard. 1999.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Marcus, J. T.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Columbia Faculty Seminar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Kwon, Jin and Seung Ku Kyoung. 2016. Research of Korean Double Attitude to Migrants. *Social Welfare Policy*. 43(1): 165-185.
- Kwon, Sook Do. 2014. A Study on South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Politics*. 23(1): 101-126.
- Lee, Man Jong. 2015. *Possibility of Terrorism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in Korea*. (Keynote Speech for) 4th 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Conferenc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Lee, Yon Seung. 2016. Social Integration of Denizens from North Korea, How to Be Possible? *Research of Ethnology(Minjok Yeonku)*. 66: 4-23.
- Lee, Yong Gyun.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o-cultural Networks of Female Marriage Migrant: The Case of Boeun and Yangpyeong.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2): 35-51.
- Marshall, Gordon. 1994.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nistry of Education. 2014 Status of Dropout Student. *Press Release*. 2015.9.8.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6. *Monthly Labor Market Analysis*. 6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u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Available at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vw\\_cd=MT\\_OTITLE&list\\_id=117\\_11714\\_A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vw_cd=MT_OTITLE&list_id=117_11714_A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 (Retrieved 2017.1.18.)
- Ministry of the Interior. *Statistics of Registered Population*.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Retrieved 2017.1.18.).
- 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Entrance and Settlement Procedure of North Korean Refugees*.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1>(Last retrieved 2016.11.9.).
- 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2> (Last retrieved 2016.11.9.).
- 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Last retrieved 2016.11.9.).
-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2016. Manual for the Re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Division, Ministry of Unification.
-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Roles in Future. *Press Release*. 2016.11.15.
- Moor, B. E., and Bernard D. Fine. 2002. *Psychoanalytic Terms & Concepts*. Trans. by Lee, Jae Hoon. Seoul: Korean Institute for Contemporary Psychoanalysis.
- Mouzelis, Nicos. 1997. Social and System Integration: Lockwood, Habermas, Giddens. *Sociology*. 31(1): 111-119.
- Munhwa.com. 2016.10.14. North Korean Refugee Inmates, 153% Increased in 5 Years.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401070403022001> (Retrieved 2016.10.20.).
-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Short title: North Korean Refugees Act). Enactment 1977. 1.13. Law No. 5259 (Enforcement 1977.7.14.).
- Priester, J. R. and R. E. Petty. 1996. The Gradual Threshold Model of Ambivalence: Rel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Bases of Attitudes to Subjective Ambiva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431-449.  
<http://dx.doi.org/10.1037/0022-3514.71.3.431>. (Retrieved 2017.1.16.).
- Refugee Act. Enactment 2012.2.10. Law No. 11298. Recent Amendment 2016.12.20. Law No. 14408.
- Riccio, Bruno. 2001. From 'Ethnic Group' to 'Transnational Community'? Senegalese Migrants' Ambivalent Experiences and Multiple Trajectori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4): 583-599.
- Song, Eun Hee and Jin Bae Sul. 2013. Perceptions of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57: 367-392.
- Study Group for Standard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erms. 1999. *The Dictionary of Public Administration Terms*. Seoul: New Information Media.
- Sul, Jin Bae and Eun Hee Song. Direction of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South Korea from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6(5): 193-216.
- Sul, Jin Bae, Eun Hee Song, and Eun Mi Lee. 2014.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The Effects of Economic Adaptation on Psychological Adapt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70: 157-174.
- Sul, Jin Bae, So Hee Kim, and Eun Hee Song. 2013. Social Network and Transnational Ident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A Focus on the Process of Adapting to Life in Korea.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0(3): 229-260.
- Sung, Hyang Sook. 2011. Trait of Local Community Adaptation of Migrant Women by Marria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2): 307-316.
- Yee, Jae Yeo, et. al. 2014. Social Integration: Concept, Measure,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Korea Social Review*. 21(2): 113-149.
- Yoon, In Jin. 2015.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Integration in Transition. *2015 North Korean Refugees and Government Policy*. 2015 North Korean Policy Conference.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고용노동부. 2016. 최근노동시장동향분석. 67.
- 교육부. 2014년도 학업중단학생현황. 보도자료. 2015.9.8.
-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정 1962. 4.16. 법률 제1053호.
- 권숙도. 2014.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연구*. 23(1): 101-126.
- 권진, 경승구. 2016.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 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43(1): 165-185.
-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전부개정 1993. 6.11. 법률 제4568호(시행 1993.12.12., 법률 제5259호(1997.7.14.)에 의해 폐지).
- 김혜림. 2016. 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66: 46-72.
- 김화순, 신재영. 2005.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눈높이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고용지원제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17(1): 191-212.

- 김희순. 2014.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통일정책연구. 23(1): 1-40.
- 난민법. 제정 2012.2.10., 법률 제 11298호(시행 2013.7.1.).
-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6.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I. 서울: 남북하나재단.
- 대한민국헌법. 제정 1948.7.17.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 10호.
- 문화일보. 2016년 10월 14일자. '탈북자 교도소 수감' 5년 새 153%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401070403022001> (검색일: 2016.10.20.).
- 미국정신분석학회. 2002. 정신분석용어사전.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vw\\_cd=MT\\_OTITLE&list\\_id=117\\_11714\\_A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vw_cd=MT_OTITLE&list_id=117_11714_A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 (검색일: 2017.1.1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1977.1.13. 법률 제 5259호(시행 1977.7.14.).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설진배, 김소희, 송은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0(3): 229-260.
- 설진배, 송은희, 이은미. 201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방안. 한국동북아논총. 70: 157-174.
- 설진배, 송은희. 2015.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6(5): 193-216.
- 성향숙. 2011.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적응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307-316.
- 송은희, 설진배. 2013. 독일의 사회통합 인식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57: 367-392.
- 엄태완. 2016.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생존과 일상의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1): 165-198.
-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제정 1978.12.6., 법률 제3156호(시행 1979.1.1.).
- 윤인진. 2015.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정책. 2015년 북한이탈주민 정책 공동학술 대회.
- 이만중. 2015. 한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국가 대비 전략. 제4회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경찰청.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용승. 2016. 북한이탈주민 통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족연구. 66: 4-23.
- 이재열 외. 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연구. 21(2): 113-149.
- 장준오, 고성호. 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선일보. 2016년 11월 14일자. 탈북민 3만 명 돌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최종검색일 2017.1.25.).
- 통일부. 2016. 2016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통일부 정책지원과.
- 통일부. 탈북청소년, '통일미래 시대 주인공'으로 성장해야. 보도자료. 2016.11.15.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7.1.18.).
-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1999. 행정학용어사전. 서울: 새정보미디어.
- 허준영. 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1): 271-300.
- 홍기준. 2000.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새로운 이론구성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39(3): 369-390.

Received: Feb. 28, 2017 / Revised: Mar. 28, 2017 / Accepted: Mar. 31, 2017

## 위기인가 기회인가?: 양가성 탐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갈등 및 위기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제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은 개념적 복합성, 인구구성 상의 양가적 특성, 그리고 이주형 탈북으로의 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심리적 적응, 경제적 적응, 기회의 평등 등 사회통합의 하위영역에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심리적 적응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과 실제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는 자립자활과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려는 양가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기회평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구별 짓기, 즉 역차별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양가성,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부)적응

Profiles **Jin Bae Sul** : She received her Ph. D. from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in 2011. She is a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Public Affairs at Yonsei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public management, public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The recent research papers ar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School Adjustment by Multicultural Background(2017)”, “A Study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S.(2016)”, “Direction of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South Korea from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2015)”, “The Effects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Middle Schools(2014)” etc.(jbsul@yonsei.ac.kr).

**Eun Hee Song** : She received her Ph. D. from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in 1993. She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INSS). The most recent publications and papers are *Korea als Factor der Weltpolitik*(2016), *21 Century Counter Intelligence*(2014),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2013), “A Study o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and Responses(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Stasi’s Operations towards West Germany and its Counter Intelligence Operations(2015)” etc.(songinss@gmail.com).